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김 영 수*

목 차

- I. 머 리 말
- II. 통일교육의 방향
 - 1. 통일 개념의 새 인식
 - 2. 통일환경의 변화
- III. 통일교육의 과제
- IV. 맺 음 말

I. 머 리 말

독일 통일 이후 다양한 통일방안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통일방식과 절차 속에서도 결코 달라질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통일'이란 통일의 본질적 의미라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의 핵심가치는 단순한 '영토의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통일'에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통일'이란 이제까지 서로 상충되는 사상과 체제하에서 상호 적대적 대립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집단이 서서히 또는 갑자기 뒤섞이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통일이 된다는 것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게 될 때,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화통합의 실질적인 문제들이다.

* 제주대학교 국민윤리교육과

민족통일의 유일한 가능성은 서로 다른 문화체계와 사고방식에서 살아 온 사람들을 하나의 진정한 민족으로 재구성하는 방법 밖에 없다. 즉, 전체 한민족을 재교육시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만드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즉, 민족통일은 두 개의 다른 정치문화 속에서 살면서 분단되어 있던 민족을 하나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가진 정치적인 민족으로 재구성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정치적 민족으로의 재구성이란 근대적 의미의 민족의식을 정착시키는 작업으로 “보다 큰 전체”, 즉 “우리”에 대한 “나”의 의식적인 긍정과 참여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 이 정치적 소속감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게 되는데, 국가의 이러한 의식적인 구성원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이며, 시민인 것이다.¹⁾

그러면 국민과 시민의 요체가 되는 정치적 소속감인 정치의식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다름아닌 교육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의 내적 통합인 사회·문화통합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이룩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통일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즉 이른바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단순한 영토통일이나 정치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란 개념에는 영토통일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남한의 교육과 영토통일 이후 남북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교육 모두가 포함된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사회·문화통합이 이루어진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교육, 더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진정한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육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의 ‘통일교육’은 ‘통일대비교육’ 또는 ‘통일준비교육’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II. 통일교육의 방향

새로운 민족형성을 위한 ‘정치교육’이며, 사회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의의를 지니는 통일교육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²⁾

- 1)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p. 89.
- 2)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한 시각은 전득주,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정치학회 편, 「1994년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 (서울, 1994), pp. 1~17와 권세기, 앞의 글, pp. 91~111 참조.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다음 그 방향에 맞도록 교육 내용이 구성되고, 이를 가르칠 교육자의 신념과 확신이 뒷받침되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통일교육은 “과연 어떤 통일이 좋으며, 어떻게 이를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치권의 의견이 제각기 다르고, 재야와 정부의 입장도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그 방향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 또 일부 교육자의 통일교육이 정부 당국에 의해 이른바 ‘의식화’교육으로 평가되어 사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³⁾

이런 상황은 무엇보다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못한 데 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며, 통일이란 무엇을 하나로 만들자는 것인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이며 또한 통일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인가?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가능한가? 통일을 추진할만한 준비태세는 갖추어져 있는가?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 어떤 순서를 따라 통일 노력을 펴나가는 것이 현명한가?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통일교육의 방향정립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일 개념의 새 인식과 통일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1. 통일 개념의 새 인식

통일교육의 방향정립 작업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작업이다. 분단 직후 통일은 곧 ‘분단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의미했으며, 통일의 당위는 분단 고통의 해소라는 단순한 논리에서 논의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이 사실상 두 개의 국가사회로 굳어져 버린 현 상태에서는 단순한 국가통합이 통일이 아니라, 한민족 사회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민족사회 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이른바 통일이라는 인식을 새로이 정립시켜야 한다.

즉, 분단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의 만남을 내다보고 통일을 설계해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관계도 이런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3)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 나남, 1992), pp. 349-351.

이와 관련하여 통일은 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을 위해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데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통일은 한민족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북한의 주민과 영토를 한국의 통치권 아래로 통합함으로써 보다 강대한 국가가 되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단순한 공리적인 발상에서 통일의 당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동포들에게도 남쪽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나누어 갖게 하자는 이타적 동포애에서 통일의 당위가 시작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남북한 주민이 서로 남이 아닌 동포라는 인식, 그리고 동포들은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바로 통일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은 또한 민족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과제라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의 갈등과 대결은 민족사회 성원 개개인에게 가족분단의 고통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고 있다. 남북한이 서로를 경계하는 군비의 유지, 외교적 소모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 등은 민족사회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을 남북한 사회 모두에게 안겨 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통일은 한민족이 굴종과 갈등의 시대를 벗어나 민족자존의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같은 통일의 당위를 고려하면서 통일문제를 보게 되면 한국이 추구해야 할 통일이 어떤 통일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저절로 분명해진다. 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북한 주민을 포용하는 식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서는 것이다. 아무리 통일을 위한다 하더라도 한국이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자유롭고, 고른 복지를 누리며, 동등한 정치참여기회를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⁴⁾ 요컨대,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통일에 선행하는 것이며, 통일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는 공리적 가치이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남과 북이 이념적 타협을 통해서 통일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일문제에 있어서 지도이념에 관한 한 현재의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주체사상체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통일환경이 급변한다 해도 변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 원칙이 확고하지 않으면 한국의 통일정책은 기초부터 흔들리게 된다.

4)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나남, 1993), pp. 354~355.

북한이 내세우는 통일의 당위는 '남반부 인민의 해방'에 있다. 북한은 1945년에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었지만 남한은 일본의 지배를 승계한 미국에 의해 다시 강점당했다는 시각에서 '못다 이룬 남반부 인민의 해방'을 통일로 보고 있다. 통일의 주체에서도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인민계급에 속하지 않는 많은 수의 남한 민족사회 성원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한민족 전체의 화합을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에 통일목표를 두고 있다. 즉 민족사회의 단일화를 이루어 민족 내부에서의 대립투쟁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민족사회 발전에 참여하게 하며, 또한 발전의 성과를 모든 구성원이 균점하도록 하는 데에 통일의 목표를 두고 있다.⁵⁾ 이에 따라 통일의 당위는 '남북한 주민의 조국근대화 과업에의 동참'에서 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통일당위론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민족적 과업인 '독립되고 통일된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거시적인 안목, 즉 분단극복이라는 테두리를 넘어선 민족사의 전개차원에서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공동체가 그 존재 이유를 민족구성원의 생존과 행복에 두어야 하며, 근대적 민족국가가 시민의 자유와 복지의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한민족도 현재 민족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고른 복지를 누리며 민주참여의 기회를 가지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과업에 민족성원의 일부인 북한 주민들을 당연히 동참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통일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요컨대, 통일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의 선결조건인 하나인 것이다.

둘째, 통일은 '자유 민주 복지가 보장되는 발전된 민족국가' 건설의 도정에서 중간에 거쳐가야 할 하나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인지시켜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내적으로는 모든 계층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이 균형된 발전의 바탕을 확립하게 되며, 대외적으로는 책임있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한의 통일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과 분단에 따른 각종 비용의 절감, 그리고 각종 제약요인의 해소로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한민족에게 가져다 주게 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남북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일의 성취는 민족적인 과제의 완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민족 전체가 도약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게 됨을 인식시켜야 한다.

5) 권세기, 앞의 글, pp.96~97.

셋째, 통일이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라고 해서 어떤 통일이든지 성급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확히 교육해야 한다. 통일은 한민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민족사회를 가장 바람직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함에 교육의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일이 민족의 희생을 되도록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또한 세계사적인 흐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면, 가능성에서나 그 합목적성에서 장기공존을 통한 점진적인 통일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한민족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폭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또한 비민주적인 통일국가의 출현도 거부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전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공존체제를 굳히고 점진적으로 교류와 협력의 영역을 넓혀 분단의 고통을 줄여 가면서 북한체제의 민주화 시기를 기다려 정치통합을 시도하는 길밖에는 있을 수 없다.

분단의 현실에서 통일을 이루는 미래까지 거쳐 갈 수 있는 길들을 상정한 후, 각각의 가능성과 그 합목적성을 검토해 본다면, (1) 북한의 국가체제가 소멸하고 한국의 주권이 북한영역으로 확대되는 통일, (2) 그 반대의 통일, (3) 서로 타협하여 새로운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통일, (4) 정치통일을 유보한 채 두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추진해 나가는 장기공존 관계의 지속 등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길은 이른바 '흡수통일'이다.⁶⁾ 더 정확히는 북한체제 해체에 의한 한국 통치체제의 확장에 의한 통일이다. 북한 내에서 정변이 일어나 북한의 현체제가 붕괴되고 친한국체제가 등장하여 한국체제에 흡수통합되어 갈 경우, 또는 북한의 내분에 한국이 개입하여 북한체제를 한국체제에 편입시키는 경우, 그리고 극단으로는 북한을 무력 해방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어느 경우도 한국의 통치범위가 북한영역으로 확대되어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형식에서는 마찬가지다.

두번째 길은 북한에 의한 '남반부 해방'이다. 즉 북한에 의한 흡수통일이다. 우선 남반부에서의 인민민주혁명을 통한 친북한정권 등장으로 북한이 비군사적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한 북한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하여 남반부를 무력해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세번째 길은 보통 '에멘식 통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남북한 양측이 협의를 통하여 하나의 헌법을 채택하여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북한의 현체제가 변혁을 거쳐 다원주의 민주체제로 되거나 한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거쳐

6)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과 통일정책," 구영록·임용순 편, 「한국의 통일정책」, (서울: 나남, 1993), pp. 39~42.

북한체제와 상응하는 체제를 가진 나라로 바뀌게 되면 가능한 길이다.

네번째 길은 '진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이 공존을 지속해 가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가면서 비정치적 영역에서부터 기능적인 통합을 해 나가면서 오랜 시간동안 각각 체제의 진화를 겪어 서로 무리없는 정치통합이 가능해질 때 통일을 완성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통일모형이나, 단기적으로 보면 공존모형, 즉 분단지속 모형이 되는 셈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통일에 이르는 길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가를 자신있게 예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너무나 불확실한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통일이 민족 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통일인지는 가려낼 수 있다.

어느 한 쪽이 '이기는 통일'이 아닌 '함께 사는 통일'을 통일의 길로 삼는다면, 통일이란 정치통합까지 포함한 완전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는 날까지의 과정을 통일의 목표에 맞도록 관리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은 승패를 가리는 것이 아닌 연속적인 창조작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넷째, 이외에도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은 누가 이루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민족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분단은 강대국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통일은 한민족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한민족 모두가 동의하는 자주통일의 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 체제가 선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민주통일의 원칙은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는 새 시대에 와서는 움직일 수 없는 통일원칙임을 인식시켜야 한다.

통일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이다. 여기서는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 고른 복지, 균등한 정치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통일은 추구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통일된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한 격을 가지고 서로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거나 소외시키는 사회는 통일된 사회가 아니며,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핍박하는 사회도 통일된 사회가 아님을 인식시켜, 민족사회 성원 모두의 평화가 보장되는 통일을 추구할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2. 통일환경의 변화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북한의 정치사정이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고 남북한의 체제적 타성 때문에 통일이 단시간에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남북화해와 통일의 전망은 대부분의 관련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⁷⁾ 따라서 통일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것 못지 않게 급변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교육시켜 통일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한국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통일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될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변화이다.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의 통일성취능력이다. 통일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수용하는 것인데 그 수용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의 기회가 와도 통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국제환경이다. 통일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환경이 조성되면 아무리 남북한이 통일을 원해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분단 이후 통일을 불가능하게 했던 여러 제약요인들이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냉전의 종식, 남북한간의 국력 변화, 그리고 통일인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통일추진능력 향상 등의 중요한 통일환경 변화로 이제 통일은 가능의 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냉전시각에 집착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에 한정되지 말고 이러한 상황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냉전체제의 특성상 냉전의 종식없이 남북분단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진영간의 적대적 대결과 진영 내 국가간의 자동결속 등으로 나타나는 국제질서로서의 냉전체제의 구조적 특색으로 인해, 어떤 나라도 진영구분선을 넘는 국가간 협력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특별한 외교적 노력없이도 반대진영 국가와의 투쟁에서는 같은 진영 종주국의 자동적인 지원을 받았다.

분단부터 냉전구조에 편입되어 왔던 남북한은 이러한 질서작동 원리를 그대로 상호관계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호간 협조는 불가능했고 그 대신 남북한은 각각

7) 최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독일 등 국내외 국제정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반도 통일은 향후 15년 이내에,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혹은 남북합의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일보」, 1995년 2월 9일자 참조.

미국과 소련의 자동적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이란 불가능한 꿈이었다.

냉전시대의 종언은 소련의 이념대결 포기로 쉽게 이루어졌다. 레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1985년부터 스스로 체제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70여년을 고수해 오던 레닌주의를 버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 체제도 포기했다. 획일적 일당체제를 청산하고 다원주의 다당정치 체제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경제에서도 국가통제의 사회주의경제 체제를 포기하고 자율적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에 의한 시민통제도 완화하고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강력하게 고수해 오던 공산진영 국가에 대한 통제를 풀어버리고 외교에 있어서 이념적 차이의 벽을 헐어버렸다. 소련의 이 개혁은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과도 같은 근본적인 혁명이었다.

소련의 변신으로 냉전체제는 급속히 와해되었다.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거의 모두가 레닌주의 체제를 포기했으며 유럽에서는 동서진영간의 대결이 완전히 종식되었다. 독일은 통일되었고, 소련과 동유럽국가들은 과거의 반공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반도 분단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남북한 통일을 막아오던 최대의 국제적 제약을 풀어주었다. 무엇보다 먼저 소련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 종식은 '한반도 통일문제의 한국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즉, 냉전체제의 붕괴는 한민족에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남북한 관계가 국제적 냉전구조에 연계되어 있는 동안 통일문제는 냉전 주도국의 냉전전략의 일부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분단극복 노력을 주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냉전 종결로 인하여 이러한 제약은 없어지게 되었다. 이제 강대국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오직 국익차원에서 남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에서 냉전 후유증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동맹국이던 소련(현 러시아) 및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두 강대국의 동의를 얻어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도 성공했다. 이제 한국문제는 일차적으로 한국의 책임과 주도로 다룰 수 있는 '한국문제의 한국화'가 이루어진 셈이다. 이것은 한국 주도의 통일노력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 준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련진영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종식이 미친 영향으로서 한국 국민들에게 국제체제에 대한 확신을 불어 넣어 준 것을 들 수 있다. 분단 이후 냉전이 지속되던 지난 세월 동안 한국이 국시로 삼아 온 자유민주주의 이념체제 및 국가체제는 북한

이 내세우던 레닌주의 체제와 대등한 차원에서의 경쟁이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던 상황이어서 한국 내에서도 레닌주의이념 동조세력이 많이 있었으며, 또한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들도 국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나 소련을 비롯한 레닌주의 국가들의 체제붕괴를 보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세계사적 조류의 본류임을 확인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레닌주의 체제가 21세기적 상황에서는 작동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허구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는 점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러한 체제인식 변화를 가져온 레닌주의 체제의 붕괴는 한국 국민의 통일열의를 높여 주었으며, 통일목표 설정에 있어서도 확실한 방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북한체제는 숙명적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과 나아가서 그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하겠다는 결의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 국민의 자신감과 결의는 한국이 통일과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사명의식이 정부의 적극적 통일정책 전개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통일환경의 변화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소련에서의 레닌주의 체제의 붕괴와 이에 따른 냉전체제의 해체는 북한의 동맹체제의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소련 및 중국과 군사동맹을 구축해 왔다. 북한은 남한 해방이라는 그들의 통일정책 전개에 있어서 이들 두 강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으며, 그러한 동맹체제는 북한에게 자신감을 줌으로써 경직된 대남정책을 고수하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교조주의적 경직성은 한국의 통일정책 전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개혁과 냉전포기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개의 일환으로 구축해 왔던 동맹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듦으로써 북한은 남반부에서의 공산혁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동맹체제의 작동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단독으로 혁명을 추진하든가 아니면 정책노선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북한의 동맹체제 해체는 남북한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북한은 무력에 의한 남반부 해방전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또한 한국과의 공존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것은 한국의 통일정책 전개에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통일을 최고의 국가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온 체제능력을 투입해 왔다. 최초의 무력해방 시도가 유엔군 개입으로 실패한 이래 북한은 외국지원을 받는 한국군을 압도할 정도의 우세한 군사능력을 건설하려고 엄청난 투자

를 해 왔으며, 무력에 의한 통일성취를 위해 군사능력을 경제능력에 부담을 줄 정도로 키워 왔다.

1990년 기준 1년간 국민총생산이 231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이 병력 1백만 명이 넘는 세계 제3위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군의 2배가 넘는 탱크와 포를 전선에 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북한은 자체의 핵무기 생산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한국군보다 우월한 군사역량을 보유하고 있다.⁸⁾

그러나 한국의 국민총생산이 북한의 10배를 넘어서게 되면서 군비경쟁에서 북한은 한국을 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앞으로 2~3년 이내에 북한은 군사능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에 놓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1970년대 초까지 한국보다 더 우월한 경제역량을 가졌었다. 공업화 초기 단계에서 북한은 강력한 동원정치 체제를 가동하여 자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성취했었다. 그러나 고도기술을 요하는 공업화 성숙단계에 이르러 북한체제의 성장은 급속히 둔화되었으며 계획의 잘못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경제체제는 붕괴의 길로 들어섰다. 1990년에 와서는 북한 경제는 -3.7% 성장이라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여기에 소련과 중국의 경제지원이 급속히 감소하는 악조건이 겹쳐 경제상황은 체제를 위협할 단계로까지 악화되어가고 있다.

남북한간의 대결은 근본적으로 체제경쟁이기 때문에 한민족 사회구성원 전체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정부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주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체제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정부가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경제건설 경쟁에서 한국에 완패했고 그 패배로 통일을 더 이상 능동적으로 추진할 추동력을 잃은 상태다. 또한 민주주의 파행적 운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한국 정부가 1992년 12월 선거에서 최초의 민간 민주정부가 탄생함에 따라 점차로 민주주의의 본모습에 충실하려는 노력을 펴므로써 남북한 정치체제의 도덕성 경쟁에서도 북한은 그 우월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현재 북한은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군사능력, 경제능력 그리고 정치 도덕적 영향력 등 모든 차원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추세가 더 지속된다면 북한은 능

8) 이영호, "냉전이후시대 우리의 방위전략 방향에 대한 소고," 「국가전략」, 제1권 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p. 79~82.

동적으로 통일을 주도할 수 없게 된다. 이미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통일정책에서 적극성을 잃고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돌아섰으며, '전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버리고 '북한에서의 주체체제의 유지'라는 소극적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는 북한에서의 전제정치 체제의 유지에도 불안을 느끼고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위축된 체제능력으로 인해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더욱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므로 당분간 정치통합 논의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대신 북한은 뒤진 경제역량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외교활동을 적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북한은 지금까지 고수해 오던 고립주의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과거의 적대국이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뿐 아니라, 끝까지 반대하던 유엔 동시가입도 스스로 반대를 철회한 바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남방정책'을 세워 열심히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강화되면 앞으로 남북한간에는 국제무대에서의 경쟁이 첨예화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대접받기 위해 국제사회의 제규정과 관행을 준수하리라 예상되므로 남북한간의 긴장은 그전보다 많이 완화되리라 보며, 긴 안목에서 볼 때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적극적 참여가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된다.

또 북한은 군사력 열세라는 상황에서 한국과 대결해야 하므로 자기방어를 위해서도 군축에 열의를 보이게 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전쟁발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군사적 긴장완화는 남북한이 다양한 협조를 전개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급속히 증대되리라 본다.

북한과는 달리 현재 한국의 통일추진능력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산업능력 기반은 이미 갖추었으며 초보적인 기술자립 능력도 갖추어 가고 있어 통일을 위한 경제적 체제능력은 수년 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민주화 작업의 성공적 전개로 1990년대 말까지는 통일을 수용할 정도의 정치적 안정을 구축할 수 있어 한국은 남북통일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아울러 한미안보 관계의 지속적 유지와 한일협력 관계의 강화, 그리고 중국 및 러시아 등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 통일의 국제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감으로써 머지 않아 통일을 저해하는 국제환경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수년간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 전체의 입장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

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적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며, 통일의 이상과 현실의 격차를 좁혀 나가는 민족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통일 이상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 이념을 국민적 기본 규범으로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체계적으로 실증해야 북한 주민들의 동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체제에서도 한국은 점차 경제에서 공공영역을 넓혀 북한체제와의 상용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정신에 기반한 과감한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은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는 길이 된다. 또한 문화적 정통성 유지가 통일의 근본적인 기초 확립 작업을 깨달아 문화통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즉,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위에서 제시한 자유민주 체제의 확립, 복지사회 건설, 그리고 문화 정통성의 확립 등이 반드시 먼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통일은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변화라는 세 가지 변수가 작용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방향정립에는 반드시 통일환경의 동태적 변화가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Ⅲ. 통일교육의 과제

앞에서 논의한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내용은 주로 영토통일 이전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어서 제대로 합의만 도출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작업일 수도 있다. 이와는 달리 남북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과 부딪치게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극적인 환희를 동반한 영토통일 이후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던 난제들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에 따른 계층 및 지역갈등으로 사회갈등 구조의 중층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간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남북한 주민들간 심리적 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며, 북한 내의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와 남한 내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쇠퇴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며, 북한 지역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하함에 따라 실업률의 급증, 노동임금 저하 및 노동시장 교란, 물가상승 등의 현상이 나타나 남한 주민들의 실질생

할 수준저하 및 사회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⁹⁾

이와 같이 영토통일로 인한 형식적인 통일한국의 성취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난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최대 과제는 이질적인 문화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하나의 국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남북한 주민들간 누적되어 왔던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 작업일 것이다.

영토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간의 상호 적대감은 사회 · 경제적 조건들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리라 생각된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현실생활에서 상당수준 순조롭게 충족된다면 사회 · 문화영역에서의 이질성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상호 적대감 해소는 남북한 주민들 쌍방의 문제이나, 남한 주도의 통일일 경우 그 심화 또는 해소의 주도권은 남한 주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며, 쌍방의 적대의식은 우선적으로 남한 주민들이 영토통일 및 북한 주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남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일비용이 과중하거나, 북한 주민들의 대량남하로 남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악화될 경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대한 남한 주민들의 차별의식 및 차별대우가 심화될 경우 상호 적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단계에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상호 적대감이 해소되는 사회 · 경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북한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하고 지역발전 정책을 실시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고용창출 및 생계지원 대책 등이 적기에 실행되면 북한 주민들의 대량남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생계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 통일한국 정부 및 그것을 주도하는 남한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완화시킬 것이며, 북한 주민들의 통일한국에 대한 자기정체성 확립을 가속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체제로 교육시키고,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른바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살아 왔기 때문에, 개인중심의 가치체제를 접해 볼 기회가 없었다. 그 결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을 하는 시장경제 체제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

9) 한백연구실, "통일한국의 당면과제 예측 : 사회문화분야 델파이조사," 「포럼 21」, 제8집 (1993년 겨울), p. 18.

이다. 따라서 영토통일 이후 통일교육은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새로운 가치체계에 적응시키는 데 비중을 두고 실행되어야 하겠다.

예컨대, 시장경제 및 민주정치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내용이 개편되어야 하고, 북한 지역에 단계적인 시장경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유 및 영리추구의 합리성을 인식시키는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집단주의의 장점과 개인주의의 장점을 융합 강조하는 민주정치교육이 각종 정부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¹⁰⁾

이러한 처방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실제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북한 지역에 이와 관련된 제도 및 관행들을 도입, 정착시켜 나가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교재개발 및 교육자들의 양성이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통일은 교육에 의해 촉진되며 가장 마지막에 가서도 교육에 의해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IV. 맺 음 말

분단 이후 남북한 두 체제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사회·경제·종교·교육제도 하에서 살아 왔다. 그 결과 찢겨져 나간 민족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 강한 '우리의식' 또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심각한 이질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민족통일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통일의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란 남북한 주민사이에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이 같아짐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사회와 문화의 통합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을 때 가능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을 무력으로 강점하는 통일이 아닌 진정한 민족공동체의 단일성 회복이 민족 통일의 과제라고 한다면, 먼저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문화전통으로 묶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남북한 주민이 적어도 같은 공동체 속에서 다른 구성원과 공존해 나감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생활문화, 가치정향 등을 공유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0) 앞의 글, p. 32.

지난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하여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겪은 남북한 주민이 공통의 문화를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분단 이전의 공동문화 전통요소를 정치지도자들이 인위적으로 왜곡해 온 북한 사회에서 살던 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양식, 생활문화, 가치정향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통일된 문화공동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가에 있다.¹¹⁾ 문화는 접촉과 교류 속에서 이입된다. 따라서 문화동질화 작업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은 남북한 사회간의 문화접촉의 기회확대라 할 것이다. 주민간의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제3국에서의 회의, 공연, 행사 등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언어의 재통일, 전통문화의 재확인, 그리고 새 시대의 생활방식의 균일화 등을 부단히 추진해야 한다.

통신이 허용되면 언론매체를 통한 사회 문화통합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발달된 영상매체의 문화동질화 위력을 감안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문화동질화도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텔레비전에 의한 40년 간의 문화통합 노력으로 큰 무리없이 통독에 성공했다.

따라서 통일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슨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사회·문화통합이 쉽게 이루어질까에 대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작업의 선행과제로 우리의 문화전통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펴 나가야 한다.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이러한 노력은 군사외교적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 군사적 능력유지, 외교적 노력 등은 분단의 안정적 관리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통합단계에 들어서면 전혀 기여 못하는 노력들이다.

남북한 사회를 현재의 분단상태로 방치하면 궁극에 가서는 두 개의 독립된 공동체로 정착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이루려면 의식적 노력으로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문화통합이 이루어지면 정치형태에 대한 의식에서도 서로 접근하게 되어 정치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 결국 지리적인 통일만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의 토양이 되는 사회·문화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회복은 단지 민족의 내적 통합을 위한 외적 필요조건이지 자동적으로 사회내적 통합으로 이어지

11)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대 방안 중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24~156.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휴전선의 철조망만 제거된다고 민족통일이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또 언어와 역사적인 전통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문화적인 민족이해가 통일의 당위성을 제공하지만, '통일한국'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분단과 함께 시작된 상이한 정치체제는 사회·문화적인 이질감의 심화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간격은 분단 이전의 역사적 전통과 혈연적 공통분모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은 과거의 어떤 상태로의 회복이나 복귀가 아닌 민족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새롭게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북한에 '주민은 있어도 시민은 없다'라는 말처럼 통일한국 구성원의 절반은 시민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한 주민을 통일한국의 시민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사회·문화통합인 것이다.

사회·문화통합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의 작업이라는 점에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교류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무엇보다 예상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떤 삶이 전개될 것인가,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은 무엇인가 등의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인 분석틀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방향이 짜여져야 한다. 그리고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 이후 전개되는 사회통합 실상을 세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될 문제들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한 통일 개념의 인식전환작업 및 통일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지도교육이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